

지구촌 양계뉴스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0년도 식품 안전성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미생물 감시·모니터링 연차계획'을 작성, 발표했다.

농림수산성은 식품안전행정에 리스크 분석이 도입됨에 따라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절차서'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스템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본 절차서에 의거하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5년간 감시·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위해요인을 명시한 '감시·모니터링 중기계획'을 작성했으며, 이번에 관계자와의 정보 및 의견교환을 거쳐 구체적인 조사대상 등을 명시한 연차계획을 작성했다.

앞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과 유해미생물에 의한 식품, 사료, 농림수산물과 그 생산환경 중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 농림수산성

미국

FDA, 가공식품 소금 사용 허용치 규정 추진

식품의약청은 국민의 1일 소금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가공식품의 소금 허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계획은 10년 예정으로 올해 시작되나 당국은 아직 법적인 소금 제한량을 정하지 않았다.

최근 한 연구에서 소금 섭취량을 약 10% 줄이면 수십년에 걸쳐 수십만명이 심장병과 뇌졸중을 면할 수 있으며 정부도 헬스케어 비용으로 32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연구소(IM)는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한해 73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을 규제하는 FDA와 육류 및 가공육을 감독하는 농무부는 공동으로 미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업자들은 제품에 원하는 만큼의 소

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금 함유량을 해당 제품의 성분 라벨에 밝히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식품업계에 자발적으로 소금 함량을 줄이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친 나트륨 섭취의 위험에 대해 교육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IM이 이날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IM은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식품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품생산업협회(GMA)의 멜리사 머시커 국장은 “우리는 이미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식품업체가 이미 소금함량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지난 3월 펩시콜라는 2015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브랜드에 나트륨 사용을 평균 25%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소금 생산업자들을 대표하는 소금연구소의 모든 새틴 소장은 “나트륨 섭취가 반드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며 “정부 규제는 대중에게 재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욕aT센터/워싱턴포스트

식품업계 칼로리 줄이기로 합의

미국의 대형 16개 식품업체가 제품에 들어 있는 총열량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조5천억kcal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16개 업체의 제품은 미국 내 식품공급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선 2012년까지 1조kcal를 줄이기로 했다.

비만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미셸 여사는 “업계가 1회 제공량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지방, 당 함량을 줄이는 등 원료배합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인이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LA aT센터 / Koreatimes

인도

유럽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규제 여전

인도는 유럽 및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수입 금지 해제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네바에서 있었던 위생조치 관련 WTO 위원회 미팅에서 미국 및 유럽 대표단은 그들의 수출품이 OIE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수입금지조치는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인도는 과거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대응했다.

- The Economic Times